

월요논단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부모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은 돌보고 있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고 또한 불안하다.

그래서 부모들은 육아센터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께 자녀상담을 하면서 언어나 걷기 등 발달이 또래보다 좀 늦다고 하면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집 안은 다 늦게 성장한다며 생물학적인 유발요인인 유전인자에서 찾는 방법으로 위안을 삼는다. 그러나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알 수 있는 임상적 평가를 통해 발달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조기 중재 서비스의 중요성

하지만 너무 나이가 어려서 우선 발달 지연 소견으로 부모들은 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확한 문제를 확인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방향이라도 잡고 싶으나 상담이나 진단 등 정확하게 안내하고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미흡하다보니 부모 중 한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여가지를 뛰어나다니는 일들이 발생하며 이렇다보니 2차 장애 발생의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대 30대 첫아이 부모들은 아이 키우기를 어려워한다. 이들은 부모역할을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려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SNS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도움을 받는 기관에서 장애 관련 지식부족으로

일찍 발견하지 못해 장애가 고착된 이후 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볼 때 많이 안타깝다.

이러한 조기 서비스가 필요한 경제성장 또는 장애 위험아동 이란 정상아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발달속도나 적응 속도가 정상아동보다 조금 느린 아동들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정말 애매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장애와 비장애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물론 국가에서 실시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K-DST로 장애 조기 선별과정을 통해 장애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장애 위험 영아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비율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적은 비율의 영유아만이 조기

개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국가에 의존 하기 보다 지역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부모들이 편하게 자녀의 문제를 상담하거나 문제의 발견 시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종합 공간을 만들어 젊은 부모들이 자녀 키우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한다.

성공적인 조기중재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영유아가 사회에 통합돼 독립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기 중재서비스는 발달이상을 빠른 시기에 발견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예방 대책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설

읍면동장 추천제, 풀뿌리 주민자치 시험대

내년부터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행정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주민이 면접 및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풀뿌리 주민자치의 시험대에 올라 주목됩니다.

제주시는 다양한 기관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아 주민권 권현을 위한 대표성을 지닌 이도2동을 시범시 합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을 선정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화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행정의 가교 역할이 중요한 지역으로 본 겁니다. 주민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투표로 최고득표자 1명을 추천하면 내년 1월부터 임명할 계획입니다. 주민추천위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인구수와 연령대를 고려해 10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추천위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추천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꾸려져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고주의에 휘둘러선 안됩니다. 응모한 해당지역 출신 공무원이 확인 등으로 엇갈릴 경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전에 우려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읍면동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어떻게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인구수와 연령대를 고려해 10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풀뿌리

선박 검사·관리인력 부족 손놓은 해상안전

제주도내 선박 검사·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해상에서 잇달아 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선박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등록 어선은 1981척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어선을 검사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에 배치 인력은 선체 담당 3명과 기관 담당 2명에 불과합니다. 선체 검사원 1명이 600척, 기관 검사원 1명이 990척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선박 검사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력과 예산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리한 조업 자체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매월 1일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 한해 6차례 점검을 실시했지만 전체 어선의 20%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다. 나머지 어선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해상안전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해상에서 선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445척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한해 평균 12.4명이 숨지고, 11.4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력과 예산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리한 조업 자체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매월 1일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 한해 6차례 점검을 실시했지만 전체 어선의 20%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뉴스-in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강력한 단속 주문

제주시, 경기도서 현장 점검

○...제주시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비상품 감귤 유통여부 등을 점검하며 구슬땀.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새벽 경매현장을 방문해 도매시장내 3개 법안에서 이뤄지는 감귤 경매 상황 참관과 하여던 감귤의 상태 및 비상품 감귤 유통여부 등에 대해 점검.

고 시장은 제주산 농수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 고대모기자

“감귤데이 재미·불거리 풍성”

○...제주도, 제주감귤연합회, 제주농협이 1일 서울 코엑스 SM타운에서 ‘겨울이 열린 즈음 제주 감귤과 함께하는 힐링 날들이 II’의 주제로 2019 감귤데이를 개최해 제주감귤의 우수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특히 올해 행사는 힐링 날들이에 맞게 감귤 올레코트별 공연과 나눔, 특산물 다채롭게 구성되며 도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불거리를 제공.

대안 제주농협 본부장은 “문화와 접목한 소비자들에게 사은 행사 성격의 감귤데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강조. 백광탁기자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서귀포시는 산불소심기간 중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이번 단속은 농업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 불법소각이 많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 공원녹지과와 읍면동 산불상황실 근무조를 2인 1조로 편성해 추진.

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 소각행위에 대한 자인서와 증거를 확보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열린마당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의, 체납액 징수



김산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주민 열에 아홉은 제때에 세금이 낸다. 혹시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납부를 한다. 우리가 쉬운 말로 ‘성실납세자’라고 일컫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성실납세자는 굳이 세금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흔히 접하는 이러한 상황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탓에 체납상황이 주목을 받는다.

고액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활약상이 TV로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체납액은 매년 누적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징수하기 위해 훨씬 많은 행정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의, 체납액 징수

그간 우리 도에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채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했고, 올해 3월에는 제주형 38체납징수팀인 ‘제주체납관리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및 자활참여를 통한 일자리 마련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 했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 운영한 결과 7개월간 총 4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고의 화두는 ‘공정한 세상’이 아닐까 싶다.

납세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라는 사실에서 나아가 성실한 납세가 공동체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절실한 부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체납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부고: 정기창(바오로, 前 제주시청 지역경제과장) 아버지 진주정공 영조(사도요한·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30일 13시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6시 5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차: 양지공원 - 아흔이흠글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정주환공 만성(향년 8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일 아들 한석부 며느리 강옥성 양성관 강영희 한석민 강영심 한석윤 이경희 한연옥 사위 정명철 한순옥 이훈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제주초특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선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극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세 렌터카: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WON 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제주도정 소식: 주택용 소방시설(주말화재경보기, 소화기)을 갖추면 화재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기자단 모집 안내. 모집분야: 50명, 25명, 10명, 15명